

창원특례시의회

<https://council.changw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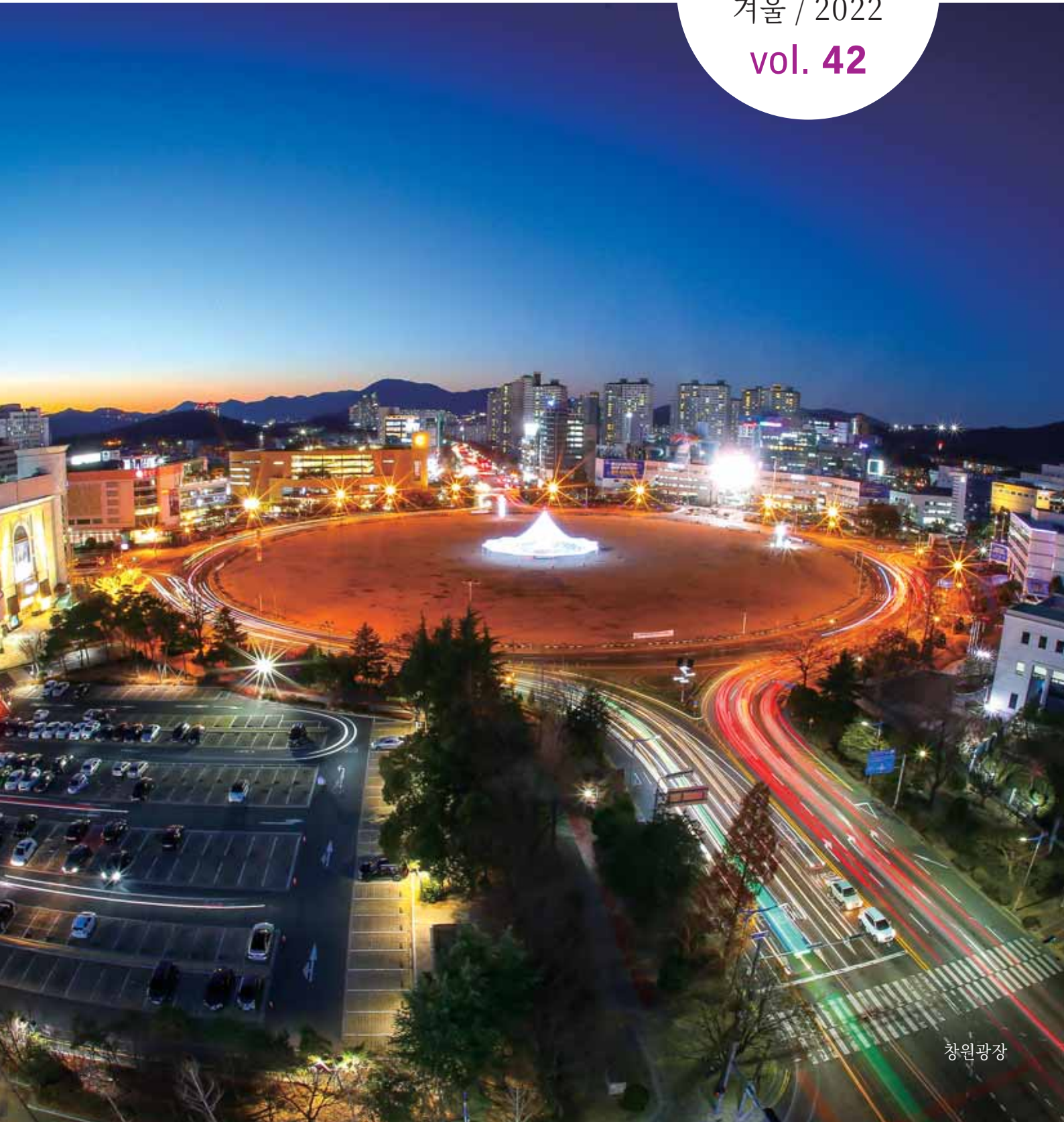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

겨울 / 2022

vol. 42



창원광장

마산합포구

아



김이근



이천수

자



서영권



이원주



홍용채

차



박선애



전홍표



정길상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특례시의회**

마산회원구

카



남재옥



이우완

타



서명일



황점복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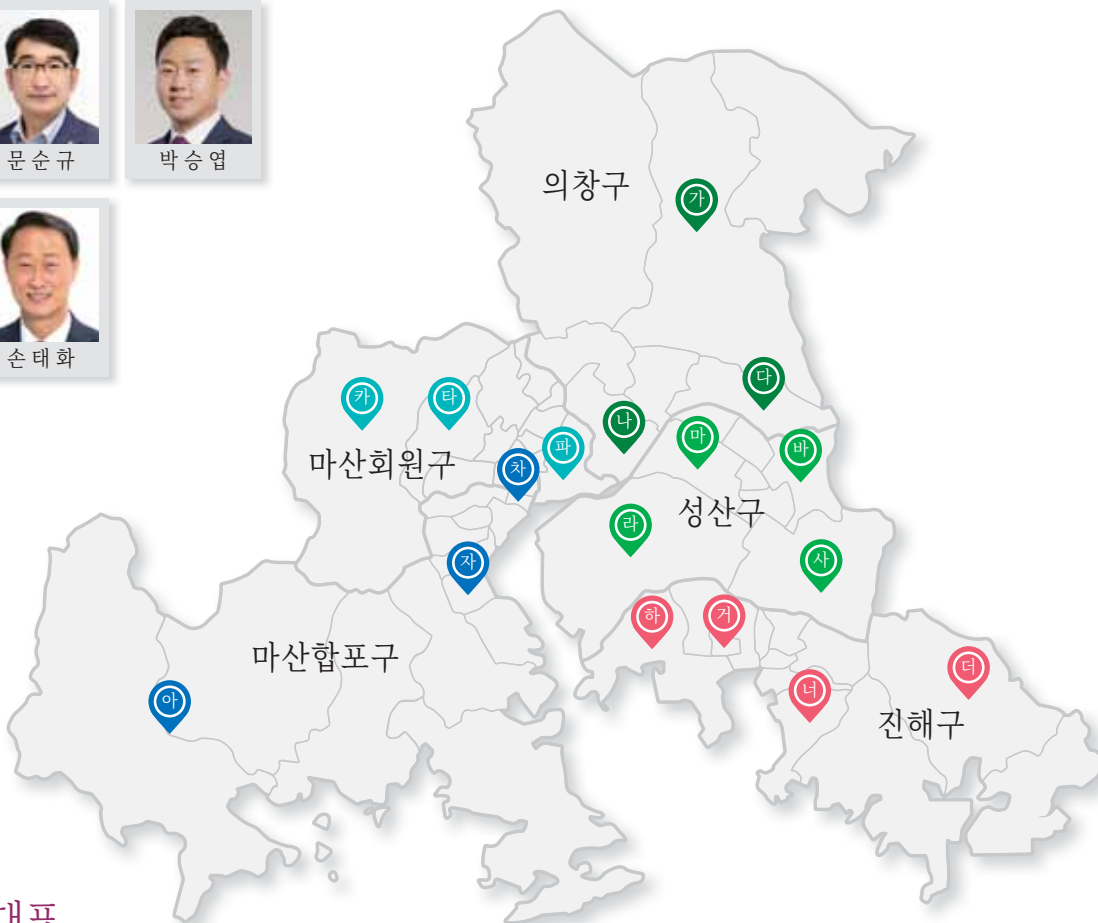
문순규



박승엽



손태화



비례대표



김미나



김수혜



박강우



오은옥



진형익

의창구

가



권성현



김우진



최은하

나



구점득



김묘정



김혜란

다



김남수



안상우

성산구

라



강창석



박해정

마



김경희



이정희

바



김경수



성보빈



한은정

사



김영록



백승규

진해구

하



김상현



이해련

거



김현일



정순욱

너



이종화



최정훈

더



심영석



한상석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

겨울 / 2022 vol. 42



창원특례시의회를
만나보세요

Contents

02 인사말

04 의원현황

10 의정활동

10 주요안건 처리현황

20 5분 자유발언

29 시정질문 및 답변

36 건의문

46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52 의원동정

52 성산구 의원포커스

61 의원연구단체 활동

63 포토광장

78 의원칼럼

84 연간 회기 운영일정

발행인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발행처 창원특례시의회 사무국
제작부서 창원특례시의회 의회홍보팀
주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전화 055)225-5334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가득찬
2023년 계묘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많은 사건과
큰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발전과 새로운 희망으로 향하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2023년 새해, 창원특례시의회의 의원 모두는 창원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노력하며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의회의 본분에 더 충실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창원특례시의 품격에 걸맞는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창원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창원특례시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2023년은 창원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원년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역량 있는 도시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주력산업인 방위·원자력·수소산업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산단 2.0 추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중요한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창원 성장의 동력산업이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창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가 민선 8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인 만큼 미래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 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이 가족과 함께 맞이한 명절입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3년은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1월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 이 근





의 장 단



의 장
김 이 근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 가포동)



부의장
문 순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의회운영위원장
구 점 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의창동)



기획행정위원장
김 경 수

국민의힘
창원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박 선 애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월명,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정 길 상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월명,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



건설해양농림위원장
권 성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대산, 북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 점 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의창동)



부위원장
황 점 복
국민의힘
창원타선거구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강 창 석
국민의힘
창원라선거구
(반송, 용지동)



박 해 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라선거구
(반송, 용지동)



서 명 일
더불어민주당
창원타선거구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김 묘 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나선거구
(팔룡, 의창동)



김 영 록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이 원 주
더불어민주당
창원자선거구
(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경 수
국민의힘
창원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부위원장
김 묘 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나선거구
(팔룡, 의창동)



김 현 일
국민의힘
창원거선거구
(경화, 병암, 석동)



이 천 수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 가포동)



문 순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김 상 현
더불어민주당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 태백동)



이 우 완
더불어민주당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안 상 우
국민의힘
창원다선거구
(봉림, 명곡동)



김 영 록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김 미 나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 형 익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박 선 애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월영, 문화, 반월중앙, 안월동)



부위원장
서 명 일

더불어민주당
창원타선거구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이 종 화

더불어민주당
창원너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김 경 희

더불어민주당
창원마선거구
(중앙, 웅남동)



구 점 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의창동)



남 재 욱

국민의힘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홍 용 채

국민의힘
창원자선거구
(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



김 남 수

더불어민주당
창원다선거구
(봉림, 명곡동)



최 정 훈

국민의힘
창원너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성 보 빈

국민의힘
창원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김 수 혜

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길상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



부위원장
이원주

더불어민주당
창원자선거구
(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



손태화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이해련

국민의힘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 태백동)



한은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정순욱

더불어민주당
창원거선거구
(경화, 병암, 석동)



최은하

더불어민주당
창원가선거구
(동읍, 대산, 북면)



강창석

국민의힘
창원라선거구
(반송, 용지동)



이정희

국민의힘
창원마선거구
(중앙, 웅남동)



김혜란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의창동)



박승엽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권 성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대산, 북면)



부위원장
박 해 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라선거구
(반송, 용지동)



백 승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사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심 영 석

더불어민주당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전 홍 표

더불어민주당
창원차선거구
(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



한 상 석

국민의힘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황 점 복

국민의힘
창원타선거구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김 우 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대산, 북면)



서 영 권

국민의힘
창원자선거구
(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



박 강 우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 은 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요안건 처리현황

의결목록

제119회 임시회 (10. 26. ~ 10. 31.) 6일간 / 총 35건

•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지방의정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원안가결
•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원안가결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원안가결
•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원안가결
•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원안가결
•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원안가결
•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공유수면매립(함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서명일 의원 등 21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문순규 의원 등 26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한 시책으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배심원이 그 처분의 양정을 심의할 수 있게 함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심영석 의원 등 26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의 이익과 시민을 위해 신속하게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명일 의원 등 21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심영석 의원 등 18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민간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확대 마련으로 신속한 수색·구조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해정 의원 등 20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도로 등에 무단으로 주차되어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견인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조례 본문에 추가하여 견인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등 26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순욱 의원 등 10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창원시의 공설시장 사용권 양도에 대한 전대사용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전대사용의 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고, 전대 사용자의 생계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의 결 목 록

제120회 제2차 정례회 (11. 25. ~ 12. 21.) 27일간 / 총 61건

•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희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부 결
•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부 결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원안가결
•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	부 결
•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원안가결
•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원안가결
•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 결
•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60	원안가결
•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정보빈 의원 등 43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대상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정훈 의원 등 14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강화·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명일 의원 등 15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 여성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최정훈 의원 등 26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정훈 의원 등 25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경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설립 목적에 맞게 재정립하고 불필요한 조항 정비와 임기 규정을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정훈 의원 등 24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여 우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오은옥 의원 등 22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해정 의원 등 22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나눔문화와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등 15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의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함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심영석 의원 등 16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손태화 의원 등 11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창원시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혜란 의원 등 10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체계보완과 창원시 공동주택에 적합한 리모델링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지원방안을 규정하고자 함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정희 의원 등 13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의 캠핑장 관리대행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해정 의원 등 25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심영석 의원 등 14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심영석 의원 등 16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이용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심영석 의원 등 16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등 26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동물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보강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등 17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경영안정과 수산식품산업을 진흥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 10. 26.(수)



김상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관광객 방문 대비 환경 정비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책 마련 촉구

대규모 행사에 많은 관광객이 창원을 방문하고, 또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최고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 최고의 효과는 ‘재방문’이며, 도시 정비를 통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한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 오도록 해양과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되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푸르른 산림이 위협받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1년 진해에서 처음 발생해 마산, 창원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했다. 현재 창원특례시 산림 4만2736ha 가운데 58.0%인 2만4786ha가 소나무다. 또 2019년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면적은 1만319ha로 전체 소나무 면적의 41.6%에 달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푸른 산림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상이변 대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방제에 힘 써주길 바란다.

박물관은 도시 문화 수준의 척도입니다

창원시는 빠른 도시 발전으로 수원, 용인, 고양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까지 이뤄냈다. 그렇다면 창원다운, 창원만의 도시 정체성은 무엇일까? 도시 정체성은 커져이 쌓여온 도시 역사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러한 도시 역사를 정리한 지역 박물관은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수원은 이미 박물관 사업소를 만들어 3개의 박물관이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고양도 큰 규모의 대표박물관이 있다. 문화가 도시 경쟁력인 시대다. 이런 이유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통합 구심점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이 보류, 재개되었다 또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창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 역사와 문화의 집결체이자 문화품격 도시의 초석이 될 창원박물관을 조속히 건립해 주기 바란다.



전홍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구점득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교육재정은 저축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아이들에게 투자되어야 한다

경남교육청의 올해 기금 규모만 1조716억 원이라 한다. 지방교육청은 중앙 정부에서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외에도 광역지자체로부터 시·도세의 3.6~10%를 법정전출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은 한정돼 있다. 반면 교육재정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정부 세수 실적에 연동돼 증가하고 있다. 경직된 법 규정으로 재정 효율성을 해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시는 학교 시설 등에 이미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학교는 학습권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주관으로 건립해야 한다. 교육청은 공간이 비어 있는 시·군에 학교건립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학교건립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이에 첫째, 학교는 불편을 겪는 학생을 위해 신속히 교육청 기금으로 건립돼야 한다. 둘째, 창원시는 행정적 지원은 철저히 하되, 재정적 지원은 법률에 근거해 엄정히 할 것을 요청한다.



오은옥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기업 내 성평등공시제 시행하자

성평등 임금공시제란 고용주들이 성별 임금 격차 보고를 의무화하고,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창원특례시 산하기관의 직급별·직종별·재직 연수별 성별 임금을 공시하는 것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한 여성 근로자 고충 상담체계 마련은 여성 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그리고 일과 생활 균형 보장, 여성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창원특례시 여성친화 도시의 슬기로운 정착과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군이 토론해 나가야 한다. 공론화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나가며 도출된 정책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으로 도입해야 한다. 창원특례시 여성 경제활동의 동력인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마창대교 총사업비는 2648억 원으로 재정지원 643억 원, 보상비 120억 원을 경남도와 창원특례시에서 50%씩 부담했다. 민간 총투자비는 3550억 원이며 자기자본금 568억 원을 제외하고 선순위 차입금 1402억 원, 후순위 차입금 158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 후순위 차입금 이자의 금리는 무려 연 11%가 넘는다. 금리 부담과 사업시행자 운영수입 보장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 이에 마창대교의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통행료 인하는 경남도의 재정지원 또는 추가적인 재구조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창원특례시는 경남도와 전담조직 상호협의체제 지속을 강화하고, 새 정부 경남지역 정책과제 실천을 위한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시민의 염원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모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천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성보빈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중심도시, 창원특례시’를 고대하며

현재 창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인구 유출’이다. 창원시 청년 인구는 9월 말 기준, 19만402명이며 전체 인구의 18.6%나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무려 3만2192명의 청년들이 창원을 떠났다. 창원시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창원형 청년꿈터 지원, 창원 청년비전센터 운영 등 수많은 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과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에 ‘민선 8기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첫째, 중장기적 실효성 있는 ‘창원 청년 맞춤형 정책 패키지’ 지원이다. 둘째,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채워져야 한다. 셋째,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 밀착 행정을 펼쳐야 한다. 넷째, 청년정책사업 예산증액 및 청년전담 부서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펀드 조성에 힘써야 한다. 청년 중심의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서영권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마산문화관, 노산기념관으로 명칭 변경을 촉구하며

전 국민이 애창하고 해외 교민이 고국을 회상하며 눈물을 머금고 불렀던 애국가 같은 노래가 노산의 '가고파'다. 최초 노산문화관으로 계획되었던 마산문화관은 현재 훌륭한 문인들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특색이 없다. 또한 타 지자체 문화관과 비교해 어떤 경쟁력이 있고, 시민의 자긍심을 향유케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당대 최고의 문학가이자 예술가인 노산 이은상 선생의 상징성이 있는 노비산에 노산기념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훌륭한 문인들을 기념하고 있는 마산문화관은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하고, 최초 건립 취지에 맞게 노산기념관으로 변경해야 한다. 우리 지역 부자(父子) 독립유공자이기도 한 남하 이승규 선생과 노산 이은상 선생을 우리 시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줄 것과 마산의 관문에 설치된 가고파비를 재정비해줄 바란다.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0. 31.(월)

창원특례시를 '스포츠 전지 훈련 메카'로 만들자!

현재 창원특례시는 야구, 농구, 축구, 사격, 씨름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의 전지훈련 여건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며 기후환경도 유리하다. 작년 시의 전지훈련 유치 현황을 보면 총 1365팀, 연 7만2070명의 선수가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훈련장을 방문했다. 이에 비해 동네 체육시설을 활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전지훈련장으로 활용 가능한 동네 체육시설은 마산 교방동 '서원곡 씨름장' 등이 있으며, 창원88과 동읍 야구장 등은 야구팀을, 합성1동 주민운동장 등은 유소년 축구팀을 유치할 수 있다. 창원시는 시설공단과 동네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해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와 숙박비 감면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의료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스포츠 마케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창원시는 스포츠 전지훈련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다.



서명일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백승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성산구청 이전을 촉구하며

성산구는 2021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의창구의 일부 지역이 편입됐다. 그 결과 인구는 2022년 9월 기준 24만9000여 명으로 3만5000여 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비해 현 성산구 청사는 좁고 열악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업무공간 확대는 꼭 필요하다. 행정에도 불어온 '혁신'의 바람은 기존 행정 이용 중심에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청사 역할을 바꾸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사 이전 대상지로 검토됐던 성산구 남양동 부지에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문화복합공공청사 건립을 제안한다. 행정타운의 복합화는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등 시설 사이의 상호보완 작용에도 매우 유리하며 구민들에게 다양한 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성산구청 이전 및 성산구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문화복합공공청사 건립을 제안한다.



박해정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팔용 농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의 확대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창원특례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은 팔용과 내서가 있으며 하루 평균 유통량은 262t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의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시장은 도에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내서 도매시장은 평균 주 1.3회, 팔용 도매시장은 월 1.2회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횟수 등에 차이가 있다. 본 의원의 지적으로 팔용 도매시장 검사를 월 2회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농산물 생산과 유통단계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어 농산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농산물도매시장의 잔류농약검사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팔용 도매시장에 잔류농약 현장검사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셋째, 생산 농가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잔류농약분석실을 농업기술센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야간 경제도시를 만들자

최근 '야간' 시간대를 관리·운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야간경제(Night-Time Economy)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야간관광은 도시환경 개선과 테마성 부여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다. 이에 창원시는 경제발전과 야간관광문화 정착을 위한 야간문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첫째, 야간경제 및 야간관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도시의 야간시간대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창원의 야간경제 활성화와 야간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방안은 다양한 야간축제 개발이다. 이에 친환경적이고 트렌디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3·15해양누리공원 '야간 드론 쇼' 주최를 제안한다. 야간축제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면 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야간관광산업 진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원주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경화동 인정사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화지역은 철길과 4차선 도로가 동서로 가로질러 남북으로 분단된 곳이다. 경화동 주민 60% 이상이 거주하는 철길 위쪽은 아파트가 건설된 신도심인 반면, 행정서비스와 초등학교, 은행 등 복지시설은 도로 아래쪽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다. 태백-경화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에 성공 확률이 낮아, 인정사업으로 전환해 커뮤니티센터를 철길 위쪽으로 올려 진행한 결과 2021년 1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센터가 들어설 곳은 철도 부지로, 매입이 확정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민의 '경화역 철도 부지에는 안 된다.'라는 반발과 정치권의 개입으로 국가공모사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창원시는 국가공모사업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반대 주민 설득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인정사업은 경화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며 공간이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



최정훈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제언

창원특례시는 출산 지원을 위해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하위 150%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다.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첫째아의 경우 최소 5일부터 최장 15일, 둘째아는 20일까지다. 평균 출산휴가가 3개월임을 고려하면 남은 60여 일은 어떠한 돌봄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명백한 돌봄 공백이라고 본다. 창원의 낮은 출산율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바우처 사용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가 절실하다. 또 예산 가용 범위 내 기존 최장 15일인 산후도우미 이용 기간을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 주 3~4회 서비스 이용으로 지원 기간을 두 달 이상 늘려야 한다. 공백없는 육아 돌봄 지원 정책으로 창원특례시가 보육과 양육 정책을 선도하길 바란다.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11. 25.(금)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여성 기업 지원을 촉구하며

창원특례시의 2022년 관내 여성기업 수는 총 847개다. 이중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이 넘는 기업은 단 35개로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또한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책은 부산광역시 등 인근 지역에 비해 미미하다. 이에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시 여성기업을 우대해야한다. 둘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여성기업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개발, 경영지도 지원이다. 넷째, 여성기업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 지원이다. 다섯째,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홍보 및 지도가 필요하다. 여섯째, 창업시 인허가 대행과 창업자금 지원이다.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하루 기초토대를 탄탄히 하고 그 위에서 여성기업이 역량을 강화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에 창원특례시의 다각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오은옥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묘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행복터널 활성화 방안

의창구는 창원의 원도심이며 역사적 가치와 창원의 근간이 되는 지역이다. 행복터널은 도시활력 증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행복의창 산책로와 이어지는 페터널이다. 시민이 안전하게 왕래하도록 조성했다는 행복터널의 보행로 벽면에는 물이 배어나온다. 골조가 드러난 벽면, 고장 난 경관 조명 등이 불안감을 더하다 못해 음산한 분위기마저 들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행복의창 산책로 및 일대에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빛 터널 조성을 제안한다. 내부 벽면 방수공사, 시멘트 마감, 수로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벽화작업과 구간별 조명설치로 편안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행복의창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활용도가 높다. 소담시장 먹거리타운 등과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접근성을 키워야 한다. 또한 천주산 누리길에 행복의창터널 구간을 추가한다면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점득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의 소비성 축제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창원 3대 축제’라 불리는 진해군항제, 마산국화축제, K팝 페스티벌을 비롯해 단감축제, 마금산온천축제, 미더덕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가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축제들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편성된 예산을 소비하는 소비성 축제에 그치고 있다. 축제도 이제는 전문화가 필요하다. 목적이 뚜렷한 축제가 오랫동안 사랑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시도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창원의 축제를 총괄해야 한다. 총괄 기구가 있다면 창원의 난립한 크고 작은 축제를 시기와 지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너지효과뿐 아니라 소모성 축제를 생산적인 축제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제는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원의 모든 축제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기구에 맡겨 지역과 축제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4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제언

창원은 공단 등 제조업 중심의 공업 도시이며 지금까지도 관련 종사자가 많다. 국가적인 산업전환기 속에서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 물류·바이오·로봇·AI 등 모든 융복합 산업의 근간은 소프트웨어다.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인재 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행정이 먼저 수요를 이끌어내고 시장을 형성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인재 양성이야말로 산업 육성의 중심이다. 더 이상 교육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센터를 직접 설치해 예산을 지원하고 1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는 그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다. 창원특례시는 다른 지자체들 보다 앞서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적극 활용해 인재양성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최정훈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해정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커피박(원두찌꺼기)을 활용한 축사 악취 저감 사업 실시를 제안하며

창원 관내 배출되는 커피박의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업체 수를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하루 평균 5700kg 정도가 된다. 이런 커피박은 현재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커피박을 재자원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중 특히 커피박의 악취 저감 효과에 주목해본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박에 미생물을 배합해 축사의 깔짚으로 이용하면 악취 저감 효과가 95%까지 나타난다고 한다. 시에서 지난 한 해 축사의 악취 제거에 소요된 예산은 약 23억 원 정도다. 하지만 축사의 악취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활폐기물 감소뿐 아니라 축사 악취 저감과 예산 절감효과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김상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관광객 방문 대비 제황산 모노레일 안전대책 및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촉구

진해담에는 진해박물관이 있으며, 상층에서는 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진해담에 가기 위해서는 중앙시장 방향의 37·38계단을 이용하거나 모노레일 옆 가파른 365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2009년 21억 원의 사업비로 운행거리 174m, 운행시간 3분이 소요되는 제황산 모노레일이 완공됐다. 운행 시작 이후 연평균 5만 여명 이상이 이용했다. 그러나 모노레일 설치 이후 단 한 번도 레일을 보수하지 않아 노후화와 마모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37·38계단에 장애인·노약자용 리프트가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가 없고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철거됐다. 노약자·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리프트 설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 많은 시민이 시의 시설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노레일 안전대책 수립 및 장애인·노약자용 리프트 설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

통합창원시의 특례인 소방사무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정부는 창원시 통합 당시 공식적으로 창원시의 소방사무 직접 수행에 따른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소방방재청과 현재 소방청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법령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경남도와 소방청은 창원시와 창원소방본부에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 소방청의 직무 유기로 세부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특별법에서 부여한 창원시의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을 들먹이고 있다. 또한 창원시 소방사무가 비효율적이고 지휘체계에 혼선을 준다는 근거 없는 주장들을 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해서 흔들고 있다. 창원시의 소방사무는 자율 통합의 인센티브이자 정부의 약속이다. 소방사무 흔들기는 지방자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다. 이에 시의회와 창원시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이천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 12. 21.(수)



김헌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경화역 공원의 보전 방안

경화역이 벚꽃 명소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12년 미국의 CNN방송에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5위에 선정되면서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경화역 부지를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다. 이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상의 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특단의 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 경화역 공원 주변의 가용부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경화역 공원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해 나간다면 명실상부한 공원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 확신한다. 기차 운행과는 상관없이 경화역 공원은 시민의 공원, 창원시의 관광 자산이다. 차근차근히 서두르지 않는 경화역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심영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진해 동부권에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해 동부권은 진해신항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형성된 신도시다. 1997년 인구 1만 명대였던 곳이 2022년 12월 7만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급속히 성장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에 따라 4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지역이다. 그런데 진해 동부권에는 10년 전부터 고등학교가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진해 동부권에서 서부와 중부로 통학하거나 부산, 창원, 마산으로 가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 진해 동부권 862명이 중부와 서부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진해 전체 과밀학급 문제도 발생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해 동부권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이다. 동부권에는 고등학교 부지도 두 개나 확보되어 있다. 신흥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창원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에 촉구한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

소방공무원으로 갓 임용된 20대 시보 김 모 소방관은 지난해 9월 6일 헌남노태풍 현장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기 위해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며 김 소방관의 목 부위를 덮쳤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최근에는 시 전 직원들의 모금 운동도 있었다. 하지만 치료 장기화로 인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지속적인 자율 모금 캠페인'과 김 소방관을 위한 '상시적인 모금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시 차원의 보상금 지원'도 필요하다. 따뜻한 기부행렬에 작은 정성이 모아지길 호소드린다. 차디찬 겨울, '어느 소방관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김 소방관의 회복을 기원한다.



성보빈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답어린이공원을 아동돌봄센터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자!



김혜란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답동 114-4번지 소답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공원 근처는 식당과 유흥가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과연 소답어린이공원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인지 의문이 든다. 의창구는 인구 대비 돌봄센터 수요가 많다. 그러나 현재 창원시의 어린이돌봄 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소답어린이공원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1층은 어린이 돌봄센터와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그 이상 층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적인 안목과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진형익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형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 개발 구축 촉구

창원의 미래 비전과 시정 운영 방향에서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산업과 기업만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창원은 제조업과 산업단지에 대한 청년층의 외면, 수도권으로 청년인구 유출, 신기술 융합 및 ICT 기업 부재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또한 청년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정주하고 싶은 규모의 지원을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창원형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 협업 프로젝트 및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핵심은 기본소득을 결합한 청년 일자리 보장제 관점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창원형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에 관심 가져 주길 바란다.

ESG를 통한 방위산업 인력을 양성하자

최근 기후 위기 등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 성과를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대기업들은 앞다퉈 ESG 경영 도입을 선언하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창원시도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ESG 경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창원의 방위산업 역량은 선진국과 겨룰만한 수준에 도달했다. 기업 차원의 인력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창원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ESG 인력양성 지원책 수립과 실천이 요구된다. 창원의 경제 부흥을 위해 ESG를 통한 방위산업 인력양성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전홍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우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자전기 도시 창원의 재도약

창원시는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이다. 하지만 최근 민간업체의 공유형 전기자전거 등 운영으로 창원의 ‘누비자’를 포함한 공공자전거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누비자 운영과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이다. 당장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지역 간 편중을 줄일 수 있는 누비자 터미널 확대와 전기자전거 누비자의 도입이다. 끝으로 카카오 T바이크 같은 민간업체의 공유형 자전거 무단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전거 도시 창원’의 명성을 되찾고 탄소 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13.(화)



문순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합성동 상업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관련

Q 마산의 중심상권인 합성동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A [경제일자리국장] 합성동 상가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Q 합성동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A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회원동, 양덕동에 22억을 투자해 주차장 126면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모사업도 추진해 보겠다.

Q 합성동 문화광장 조성은 시급한 과제다. 이에 대한 시 입장과 계획은?

A [경제일자리국장] 문화광장 조성은 꼭 필요하다 본다. 주민과 상인들을 적극적 중재해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Q 현재 합성동 지하상가의 공실률과 영업손실은?

A [경제일자리국장] 합성 지하상가 411개 중 대략 140개가 공실인걸로 안다. 손실 부분은 2020년부터 작년 9월까지 3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Q 올해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를 창원시에서 설립예정인데 합성동 지하상가 공실에 설립한다면?

A [경제일자리국장] 접근성, 입지 조건은 굉장히 좋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Q 합성동 지하상가 관리운영 기간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관리운영 기간을 연장해서 손실 보전해 줄 방법은 없나?

A [경제일자리국장]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합당한지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을 요구한 상태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Q 전담팀을 구성해서 합성동 상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A [시장]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하드웨어적 구축도 해야 할 것이다. 협의기구 구성도 검토해 보겠다.

수돗물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Q 작년 7월 석동정수장 갈따구 유출 발생과 관련해 창원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갈따구 유출이 본포 원수에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A [상수도사업소장] 전체 공정에 대해 점검함 결과 원수에서 많은 조류와 유출알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Q 창원시는 유출 발생의 원인 규명과 대책수립을 위해 민관합동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의 공식 입장은?

A [상수도사업소장] 특위에서는 낙동강 본포 원수를 통한 유입과 정수장 내부 발생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Q 정부 기술지원팀의 조사 결과는 유출이 정수장 내 유입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단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이의제기 등을 한적 있는지?

A [상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만 통보했다.

Q 창원시는 작년 8월 수돗물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 757억 원의 재원 확보 방안은?

A [상수도사업소장] 작년 추경 예산과 올해 본예산에서 165억을 확보했고, 정수장 간 상호공급체계 구축 사업 580억 중 45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Q 한해에 환경청에 200억 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한다. 창원시가 유출 발생 원인과 관련해 정부에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국비 지원과 시설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A [시장] 먹는 물 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유출 문제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편에 서서 환경부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목소리를 내겠다.

Q 녹조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이 사실상 더 문제다. 석동정수장 시설고도화사업에 1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최소 50% 이상은 국비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시장님 생각은?

A [시장] 석동과 칠서 그리고 대산정수장 간에 깨끗한 물을 상호 연계하는 국비 예산 580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2026년까지는 완공하겠다.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따도록 하겠다.



정순욱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경화동 주민의 행정적 소외감에 대해서

Q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감사 배경과 감사 자료 수집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A [감사관] 22년 9월 말경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감사에 착수했다.

Q 감사 결과 주민 의견 수렴 미흡, 용역 감독 소홀, 건축계획 부적정 3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근거는?

A [감사관] 사업 초창기 주민의견수렴 부분이 다소 부족했던 점, 지역환경만족도 조사 부분에 있어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에 대한 경미한 과실 그리고 견제율 권고 기준을 다소 초과한 부분이 있었다.

Q 세 가지의 내용 모두 행정의 잘못 아닌가?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시민인가, 행정인가?

A [감사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초창기에 좀 미흡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게 감사 결과였다.

경화역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

Q 경화역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며 부지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

A [환경도시국장] 정확한 명칭은 경화역이고 현재 부지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다.

Q 이 땅은 철도청소유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

A [환경도시국장] 토지에 대한 결정권은 그 관리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인 가지고 있다.

Q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국가 공모사업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나?

A [환경도시국장] 문제 부분은 주민여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Q 2018년도에 진해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예산이 투입된 경위와 사용처는?

A [환경도시국장] 2016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에서 창원시가 선정되어 국비 21억 원, 시비 9억 원을 경화역에 투입했다.

Q 지금 현재 폐역에 우리시가 임대를 하고 있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임대가 안 된다면 모두 철거 해야 한다. 어떤 하나의 단체가 84억 국가공모사업을 뒤흔드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행정의 잘못이지 않나?

A [환경도시국장] 추진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 현재 논쟁이 있고, 사업이 결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표류에 대한 시의 입장

Q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만약 부지 이전으로 결정났을 경우 국토부가 이를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현 위치에서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표류시키나?

A [시장] 당장은 여러 이해 집단 간의 이견들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다른 대안이 있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설계 변경된 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Q 경화 주민은 그곳에 인정사업 같은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 만약 부결이 된다면 이 사업을 시비로 진행하실 의향은?

A [시장] 많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좋은 대안이 나오면 확보된 국비를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로라도 해서 경화역 전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혜택들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이곳은 3년 뒤 재건축과 재개발로 차량통행이 급격히 많아진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이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 표류가 된다고 하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을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줄 생각은?

A [시장] 최대한 확보된 국비를 활용해 전체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만약에 이 용도로 진행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다른 국비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경화역 주변의 사회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답을 찾도록 하겠다.



전홍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박물관 건립사업 제반에 대해

Q 통합 창원특례시에 마산, 창원, 진해 3개의 시를 구심점으로 엮을 수 있는 문화적 기구나 기관 그리고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나?

A [시장] 아직은 시너지를 낼 만한 랜드마크로서의 문화시설은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

Q 통합시가 된 이후 이 3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통합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사업이 추진되었다. 현재 창원시립박물관의 건립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A [시장]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Q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립박물관으로 승인받은 조건은 무엇이었나?

A [시장] 문광부에서 타당성 적정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인력운용에 대한 문제, 상시 기획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가 조건들이 있다.

Q 현재까지 박물관 건립사업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줄 안다. 어떤 절차를 거쳤나?

A [시장] 문광부 검토 후 현재 행안부에 투자적정성을 조건부로 허가받았고 다시 조건부에 대한 것을 검토해 2차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Q 창원시립박물관은 2010년부터 준비되었고 문체부와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이미 기 득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취소되어서 똑같은 사업을 2018년부터 다시 밟고 있는 상황이다. 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 창원시의 조사결과는?

A [시장]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왔다. 타 지자체가 비용 10을 투입하면 편익 1개가 나온다면 창원은 약 2.3배 높은 편익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Q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불의향금액을 파악하게 되어 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창원시의 지불의향금액은 얼마로 나왔나?

A [시장] 타 지역에 비해 9.3배 정도 높다.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Q 서울과 타 지자체와 비교해 우리시 문화시설 수준은 어떻다고 보나?

A [시장] 상당히 높은 편이다.

Q 열악한 문화 인프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의 정책 방향은?

A [시장] 앞으로는 문화 예술도시로서 나가야 한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내부 콘텐츠를 많이 보강하겠다.

Q 창원에서 발굴되고 조사되었던 유물 중에 창원이 아닌 타지에서 떠돌고 있는 유물과 문화유산의 현황을 알고 있나?

A [시장] 일부 출토되었던 유물들이 창원에 보관될 수 장고가 없어 중앙박물관에 간 것도 있고, 일부 대구에도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안다.

Q 박물관이 하나의 문화적 액세서리 또는 의례적으로 갖추어야 할 무언가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A [시장] 파리 등 여러 나라의 박물관을 가보면 한 시대의 또는 한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장소는 박물관만 한 곳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박물관이 있으면 좋은데 다만 속도 조절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Q 박물관이 단순히 관람 수익의 증대 차원이 아니라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시장] 공감한다. 지식이라는 게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인류의, 또 우리 국민들 또 창원시민들의 그런 지식들이 다 어우러져서 마지막에 나타난 게 현재다. 앞으로 문화적 자산을 계승 발전시켜서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Q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의 증가뿐만 아니라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의 증가를 주장하는 창원시와 문화를 주장하는 박물관이 같이 공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A [시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둘 다 같이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 12. 14.(수)



김상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육대부지,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Q 산업도로에서 육대부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신설되었다. 예산 규모와 착공·개통 시점은 언제인가?
A [도시개발사업소장] 여좌지구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2월 착공해 2021년 12월 준공, 개통했다. 소요된 예산은 총 80억 원이다.

Q 기존 도로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고 도로를 건설한 이유는? 실시설계시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A [도시개발사업소장]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제반규칙 적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도로를 만들었다.

Q 도로 건설 과정에서 세운 첫 번째 교각이 법면인 비탈면에 공사됐다. 지난 폭우로 비탈면이 무너졌는데 그 상태에서 비탈면을 보강해 공사가 진행된 건 아닌지?
A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전 부분에 대한 염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모든 지하 구조물은 보강시설을 하고 올리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Q 인근 돌산마을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봤다. 그런데 신설도로 옆 마을과 육대부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축대로 막혀 단절됐다. 왜 이렇게 공사했나?
A [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산업도로에서 여좌지구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1개 차로 개설을 설계 계획 중이다.

Q 도로 개설로 현재 여좌지구에서 마산 방향으로 가는 길이 없어졌는데?
A [도시개발사업소장] 내년 여좌지구에서 마산 방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Q 여좌지구도시개발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도로 연결은 어떻게 할건지?
A [시장]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도로는 진해와 마산 양방향으로 빠르게 교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선임 관련

Q 창원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올해 신규 임원임명 기관은 몇 곳인지?
A [기획조정실장] 공기업 2개, 출자·출연기관 9개이며 공개채용은 6곳이다.

Q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분들의 인사 검증을 했나?
A [기획조정실장] 따로 인사 검증하는 제도는 없다.

Q 그렇게 해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이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나?
A [기획조정실장]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독립된 기관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가 관여 할 수가 없다.

Q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임명시 어떤 자격요건을 충족했나?
A [기획조정실장]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이 된다.

Q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몇 명이며 누가 들어가 있나?
A [기획조정실장] 총 7명이다.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추천이 2명, 도의회 추천 2명, 시의회 1명, 그리고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이다.

Q 지방공기업인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은 경남도와 협의해 최종 창원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와 협의 했나? 각자 역할은 어떻게 되나?
A [기획조정실장] 도와 협의를 했고 운영은 창원시에서 맡아서 한다.

Q 창원시장과 창원시의장이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검증협약을 했다. 이번 인사검증 지원서류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며 요구자료를 제대로 안 준 이유는?
A [기획조정실장]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됐다.

Q 일각에서는 레포츠파크이사장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자격과 제출된 추진계획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시장] 임명된 지 이제 두달 정도 됐고 시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강화해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고, 성과가 안 나올 때는 질책을 감내하겠다.

Q 향후 모든 공기업이 보는 인사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임용이 되어 창원시를 위해 일했으면 한다. 공기업에 전문 경영인을 임명하길 생각은 없는지?
A [시장] 이번에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게 작동되다 보면 창원 공기업 기관장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본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창원에 있는 공기업 출자기관들이 성과를 내는 데 많이 노력을 하겠다.



이정희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추후 과제

- Q**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구별, 읍면동별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 A** [복지여성보건국장] 관내에 총 8개가 있다. 노인복지관은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무래도 거리가 멀수록 차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적게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 Q**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록회원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등 이용 현황에 대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A** [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관에서는 회원 재등록 공고를 통해 회원 현행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Q** 창원시는 그동안 수십억 원을 들여서 빅데이터 전산망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다. 빅데이터 전산망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또한 등록회원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A** [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관 회원 관리에 빅데이터까지 활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래도 필요하면 빅데이터 분석도 하겠지만 철저한 회원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 Q** 향후 증축 또는 지역별로 안내해서 중규모 노인복지관 신설에 대한 견해는?
- A** [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 노인복지관의 이용자 추이와 분포 등 수요분석을 통해서 향후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면 노인복지서비스 소외지역을 분석해 중규모 노인복지관 설치방안도 검토하겠다.
- Q**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복지관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 A** [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수립된 계획은 없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1년에 1%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향후 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가 되면 추가 건립을 검토하겠다.
- Q** 전체적으로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연면적 100㎡ 내외인 작은 규모로 신축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건지?
- A** [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경로당은 가급적 1층으로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부지 여건상 100㎡ 내외로 건립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경로당 신축 규모는 대상 지역의 노인 이용자 수, 부지확보 상황, 주민 의견 등 지역 여건과 예산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축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Q** 이용자의 편의와 경로당 운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실내공간의 쾌적성이 확보되는 적정 규모의 경로당 신축에 대한 견해는?
- A** [복지여성보건국장] 향후 신축 경로당의 규모와 형태는 미리 한계를 정해놓기보다는 대상 지역의 수요와 부지 여건, 주민 요구사항, 운영관리 측면 모두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 Q** 현재 운영 중인 구별 노인종합복지관은 소재해 있는 인근 주민을 제외하고 원거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은 지양하고 중규모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제안하는데?
- A** [시장] 공급자 시각보다는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큰 규모의 종합복지관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간 규모를 많이 공급하자는 게 어르신들의 생각이 아닐까 한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현장에 그런 철학을 담아 복지관을 운영하겠다.
- Q** 성산구 웅남동 신촌경로당은 현재 실제 건폐율과 용적률이 30% 미만으로 필로티 부분을 리모델링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A** [시장] 공간의 활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르신분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 Q** 마산회원구 양덕2동 탑골경로당의 남성경로당은 이용이 거의 없는 상태다. 신축건물을 그대로 두기 보다는 남·여경로당을 통합해 많은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한지?
- A** [시장] 일단 한번 살펴보겠다.



구점득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

Q 창원박물관 건립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A [문화관광체육국장] 2010년 창원시의 대표 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문체부 타당성 사전평가는 통과되었지만 이후 행정적인 절차 등의 사유로 2016년 중단됐다. 이후 2018년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2021년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최종승인을 거쳐 2022년 3월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Q 추진과정에서 문화적 공간이나 정체성을 채우기 위한 일들도 함께 했나?

A [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약간 부족했던 것 같다. 행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추진했다.

Q 우리 시에는 기념관을 포함한 박물관이 8개소 있다. 2개의 대학 박물관을 제외한 박물관과 기념관의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가?

A [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 1억1,400만원, 인건비 2억3,000만원 정도 된다.

Q 인근의 김해와 진주에 국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우리 시도 국립박물관을 요구해 왔는데 현재 국립박물관 건립은 가능한가?

A [문화관광체육국장] 국립박물관 유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Q 창원박물관이 지방전환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왜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었는지?

A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운영지원사업이 2023부터 지방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전환사업비는 경남도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올해 도비전환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았고 향후 경남도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사업비도 문제지만 운영관리비는 우리 시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될 것이다. 많은 고민을 하고 건립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고 본다. 신축 운영할 창원 박물관이 인근 지역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나?

A [문화관광체육국장]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본다. 그래서 산업을 키워드로 특화할 계획이다.

Q 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지역 박물관에서 보기 힘든 우리 지역의 유물들은 어느 정도 수집이 되었나?

A [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기증과 구입을 통해서 3,700여 점의 유물을 확보했다.

Q 울산에 국립산업사노동박물관이 건립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박물관 차별화는?

A [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울산은 박물관은 확정된 것이 없어 차별화를 논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Q 창원박물관이 처음 계획 규모대로 건립된다면 매년 투입비용은 얼마 예상하나?

A [문화관광체육국장] 연간 3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창원은 100만 대도시다. 박물관의 적정 개수가 몇 개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문화관광체육국장] 적정 규모는 말하기 어려우나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지역들을 보면 대개 10개 정도 갖고 있다.

Q 박물관 방문이 시민들의 자긍심과 문화적 향수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공식적인 발표나 조사된 사례가 있나?

A [문화관광체육국장] 창원박물관 건립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67.2%가 박물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Q 6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100만 창원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건물에 치밀한 계획 없이 시작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대안은?

A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근 박물관 기능이 융복합화 되고 있는 점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내년에 창원박물관 관리·운영 방안 기획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창원의 종합박물관이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문화관광체육국장] 창원박물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전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 내년 용역에 잘 담아서 추진하겠다.



박선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특례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가입 개선의 건

- Q** 창원시는 현재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 A** [자치행정국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 Q** 오·하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도 현재 가입되어 있는지?
- A** [자치행정국장] 현재 하수관 관련해서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2023년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가입 할 것이다.
- Q** 창원시민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시에 보상받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 A** [자치행정국장] 침수 등 사항은 재난구호 관련 기준이 있다. 그 외는 국가손해법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고 있다.
- Q** 영조물 손해배상이나 국가 배상청구 등의 제도를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 A** [자치행정국장]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 Q** 우리가 넣는 보험액에 비해 보상액이 평균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공제보험 대상 시설물의 현행화 상태는?
- A** [자치행정국장] 시설물 공제대상과의 현행화 일치 부분에 면밀히 신경을 쓰겠다. 또한 시의 재정예 부담되지 않도록 공제제도를 잘 활용해 시민들에게 혜택 여부와 가입 시설물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리겠다.

항일독립운동가 괴암 김주석 선생 재조명과 역사자료 보존 필요성의 건

- Q** 창원지역 항일투사이자 예술가인 괴암 김주석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A** [제2부시장]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김주석 선생의 공훈은 정말 높이 평가한다.

- Q** 김주석 선생의 항일투쟁 옥중자료나 예술작품들이 소중한 역사적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 A** [제2부시장]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Q** 김주석 선생 기념관이 반월지구 재개발사업으로 빠르면 2년 내 철거대상에 들어간다. 진동의 한 개인 미술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 계획인걸로 알고 있는데?
- A** [제2부시장]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금강미술관에 임시 보관할 예정이다.
- Q** 매년 김주석 선생 기념 책자 발간에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다. 계획은?
- A** [제2부시장]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다.
- Q** 김주석 선생의 역사자료와 작품들을 보관, 전시할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되었으면 하는데 시의 견해는?
- A** [시장] 박물관 등의 공간들에 대해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꼼꼼히 챙겨보겠다.

사회복지법인시설 공익제보와 국민감사결과를 통한 사회복지법인 관리 지도·감독 시책 강구 건의의 건

- Q** 지난 21년 6월 창원시 관내 한 사회복지법인의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방임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다. 21년 8월 17일부터 22년 3월 1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맞나?
- A** [제1부시장] 맞다.
- Q** 국민감사 결과로 실무부서나 담당자가 아닌 창원시 전체에 행정상 ‘주의’ 및 ‘통보’, 또 재정상 ‘여입’의 감사 지적을 받은 것도 알고 있나?
- A** [제1부시장] 알고 있다.
- Q** 창원시 전체에 감사관이 내린 지적사항에 창원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했는지?
- A** [제1부시장]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했고 잘못 들어간 돈은 여입 조치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치에 따라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Q**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회복지법인 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창원시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A** [시장]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이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서 잘 관리·감독해 나가겠다.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촉구 건의문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우리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연안의 경관을 훼손하고 심미적 가치를 하락시켜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며, 해양 생태계 및 서식 기반을 파손시켜 수산 및 생물자원의 손실을 주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뿐만 아니라,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노력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집하기 위한 장비 운행이나 수집된 쓰레기들을 처리시설로 운반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의 아름다운 고유의 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결국에는 국민 생활의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연근해 일부 해역의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 후 단계별로 수거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부유·표착 쓰레기 및 어로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에 한정되어 있어 해양자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 확보 규모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금번 창원시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정어리떼 집단 폐사 사건의 경우, 어류폐사 사고는 재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 및 처리, 원인 규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애로가 많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유형에 따른 조치 및 행동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어류폐사 사고는 그 상태에 따라 관심~심각의 단계로 구분하고, 어류폐사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지자체 또는 유역환경청 등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하고 원인 규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해양에서 발생한 어류폐사 사고의 경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주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후 및 어장 환경의 변화로 이러한 피해 발생 우려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연근해 해양쓰레기에 대해 국가 책임하에 예방 및 수거처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줄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등에 대한 수거처리 대책을 국가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라.

- 풍수해로 인한 육상쓰레기의 해양 유입 원천적 차단 대책 강구
- 수년 동안 쌓여있는 수중 침적 쓰레기양 조사 및 준설, 조기 처리
- 해상가두리 저층 퇴적물 준설 지원 확대 등

하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 및 자연자원 물질 수면 배출 가능
- 선망 및 권현망에서 조업 중 혼획되는 어획물 중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어종해양 배출시 부영화 및 빈산소 수괴 형성으로 연쇄적 대량 폐사체 발생 가능성 농후

※ 혼획된 수산동식물 및 자연자원 물질 정의 및 배출 절차 불명확,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신속 수거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하나. 수산물 유통 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업인 및 대국민 의식 전환 교육, 캠페인 전개 등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을 강구·추진하라.

2022년 10월 26일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지방의정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한 이후,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 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견제·감시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3만 4천여 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하였으며, ‘의정동우회’를 구성하여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직 구성과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이다.

2020년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를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행정 동우회는 공익 봉사활동,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홍보 및 우수시책 건의 등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는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 7개 퇴직 공무원단체 중 ‘지방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직 의원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의원과 공유하면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전직 의원들에 대한 의정회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를 역행하는 것으로써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받들고 전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골고루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인 「지방의정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26일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 촉구 건의문

지난 7월 창원시 진해구 석동정수장에서 갈따구 유충이 발견되었으며, 석동정수장으로 공급되는 낙동강 원수에서도 갈따구 유충 알이 발견되었다. 또한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갈따구 유충이 다수 발견되어 창원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실정이다.

창원시민들은 2000년 초반부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창원시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2,230억여 원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매년 150억 원가량을 납부했음을 뜻한다.

이렇게 창원시민들이 지불한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되어 낙동강의 수질개선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본포취수장에서는 4급수 지표종인 갈따구 유충이 발견되는 등 낙동강 원수 수질 악화로 그동안 수돗물을 신뢰하며 성실히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던 창원시민들은 수돗물 신뢰 회복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창원시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소 및 활성탄을 추가 투입하고 정수 시설을 일부 개선하였으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2022.10.4.)을 통하여 150,000여 피해 시민들에게 15억 원의 예비비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수돗물에 대한 대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원수인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창원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낙동강 원수 수질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의는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낙동강 원수 수질을 상시 2등급 이내로 회복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 납부 연동제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원수 수질이 회복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과 원수대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액하라.

하나. 정부는 수돗물 신뢰 회복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창원시 정수장 시설 개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

2022년 10월 31일

창원특례시의회의 의원 일동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문

1973년 6월 도시의 인구집중 및 무분별한 도시확장 방지와 자연녹지 보존을 위해 지정된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248.5km²로 전체 행정구역(748.05km²)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창원특례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창원특례시와 같은 명분인 산업도시 주변 보호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던 여수권은 전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특례시는 해제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되고 있는 지역은 7곳으로 수도권, 광역시권을 제외하면 중소도시로는 창원특례시가 유일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 방지와 자연녹지 보존이지만 현재 창원특례시는 인구의 감소와 시대적인 변화로 그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현재 창원 지역에 지정되어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을 둘러싸고 있어 도시공간 구조가 단절된 형태가 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 수소 관련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공단 조성 부지 부족을 야기하는 등 오히려 도시발전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50년간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50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및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 역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년 동안 개발제한에 묶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재산적으로 가치 없는 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없이 그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2조에는‘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인구 및 도시 팽창요인 감소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첨단 산업화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창원특례시의회는 103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창원특례시의회의 의원 일동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문

창원시특례시의회는 마산합포구 가포동 소재 국립마산병원 인근 거대 국유지로 인해 가포동 지역 개발 제한 및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 국유재산 불하를 강력히 건의한다.

지난 75년간 국립마산병원이 가포동 지역에 위치하면서 인근 부지 19만여 평이 국유지(관리청:보건복지부)로 묶여 가포동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는 지역 주민의 주택 개보수 제한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국립마산병원과 협의 하에 재건축한 인근 교회는 지금까지도 양성화되지 못하고 무허가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70여 년 동안 가포동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고, 병원 현대화 사업으로 재건축이 마무리된 이후 한 번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

국유재산법 제40조에는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적극 매각·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즉시 매각이 곤란한 재산은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마산병원도 인근 국유지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부 또한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용도폐지 및 매각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정책 실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마산병원과 함께 1946년부터 인접하며 수십년 겪어 오고 있는 지역 주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19만여 평이 국유지로 묶여 지역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즉각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최근 정부의 유휴 국유지의 적극적인 매각 의지에 따라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가포동 지역 유휴 국유지는 불하하라.

하나, 국유지 중 향후 행정재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으나 매각이 곤란한 유휴 국유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하라.

2022년 11월 25일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우리나라 고속철도산업은 ‘기술자립’이라는 일념 하에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정부와 국내 제작사들이 약 30여 년간 2조 7,000억원을 들여 탄생시킨 첨단기술집약체이며, 순수 국내기술로 세계 4번째 고속철도시대를 열게 된 국가 미래성장동력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철도제조산업은 수주산업이며 수요자가 국가나 지방정부로 그 시장의 규모가 국한되기에 개방과 경쟁을 가치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HO GPA)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 철도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부품업체 사용을 강제하는 현지화 정책과 엄격한 기술 및 환경기준, 기술제공 및 이전 등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여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의 중요성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하고 있으나, 국내 철도산업은 주문생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정부의 주문과 입찰에 의해 수주를 해야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 업체들의 경영상황이 타 산업에 비해 불안하고, 종사자 50명 이하의 중소 영세업체가 96%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철도산업은 각국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주하지 못할 경우 경영난이 심화되어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2027년 개통예정인 평택~오송선에 투입될 고속차량 발주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해외 제작업체가 국내시장 진입을 위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철도산업이 밀집된 창원 및 경남지역 50여 개의 업체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수많은 시간과 인력 자원을 투자하여 이뤄낸 순수 국산기술인 고속차량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해외업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의 보호 육성 의지 부족은 물론 정부의 산업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의 의원 일동은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과 지원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막대한 정부 민간 예산투자로 획득한 국책연구개발 성과인 고속전철 기술을 국가의 핵심기술로 지정하여 해외철도 시장으로부터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나라 고속철도 기술보유를 위해 오랜기간 땀 흘려 온 국내기업 및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철도차량 공급의 입찰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철도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미래동력산업인 철도산업의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특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체계 구축 등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 육성전략을 수립하라.

2022년 11월 25일

창원특례시의회의 의원 일동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수도권에만 편중된 공공의료서비스의 균형적인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경찰청, 해양경찰청)과 소방공무원의 치료를 맡는 종합병원이지만 국군병원과는 달리 민간병원으로 운영되기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민의 의료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창원시 진해구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건립의 최적지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공백을 줄이고 균형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경남지역의 경찰관 수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다음으로 많다. 거기에 남해해양경찰청과 창원해양경찰서 등이 소재하고 있고 촘촘한 교통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남부 지역의 의료 수요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경찰병원 본원이 서울에 있고, 소방병원은 중부권에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남에 경찰병원 분원이 건립되면 남부권 지역 경찰·소방의 의료공백을 줄일 수 있기에 국가는 균형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창원시 진해구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인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일대는 부지 면적이 3만 2420㎡에 이르는 국방부, 산림청, 기재부 등 소유의 국공유지로서 건립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 6차선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ktx 연계와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교통체계, 향후 대단지 아파트 건립 계획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가 균형적 공공 의료 서비스 실현을 위한 최적지로 부족함이 없다.

셋째, 의료 수혜 인원이 수도권 다음으로 많다.

경남지역 경찰관 수는 6,070명으로 의료수요가 많은 편이다. 부지 반경 20km 이내 102만 창원특례시민을 포함, 인근 부산 강서구민·김해시민 등 공공 의료 수요가 170만명에 준하며 인접 광역시에서도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므로 국가 균형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정책의 목적을 충족한다. 창원시 진해구는 의료수요 충족, 인구 밀집도에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반드시 '창원시 진해구'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2년 12월 13일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7월 1일자로 면적 744.26km², 예산규모 2조 5,000억원, 인구 110만명, GRDP 29조원 등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여건을 갖춘 자율통합 1호 도시로 출범하였다.

창원시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행정통합으로 탄생한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일시에 행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는 광역행정 수요 대응이 어려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부 광역사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중 소방사무는 타 대도시와는 달리 오직 창원시에만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정부는 자율통합의 인센티브로 창원시장이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창원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행정을 제공하게 함은 물론, 획기적인 행정과 재정혜택을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사무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2011년 10월 11일 소방 본부의 지정 운영과 인력 605명 (3개 소방서 인력 580명, 경상남도 소방본부 인력 25명)의 이관, 3년간 창원시가 징수하는 도세의 6.2%를 운영예산으로 창원시에 직접 교부,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시세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을 위한 조치 필요 사항」을 시달하여, 당시 소방방재청, 경상남도, 창원시에 관련 법과 조례 정비를 주문하였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과 경상남도 및 창원시 조례는 위 주문에 따라 개정되었으나, 소방청은 특별법의 취지와는 달리 창원시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소방기본법 등 세부 법령 13개(당시 11개 법령)를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창원시는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방기본법 등 13개 법률에서는 소방사무의 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제천화재, 2018년 밀양화재,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사고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소방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방청의 독립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시행되었고, 그에 발맞춰 타 광역시·도의 소방본부는 조직의 외적 확장과 내적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이에 반해 창원시는 관련 법령에 가로막혀 임시적 조직으로 출발한 창원소방본부의 조직구조가 현재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한 광역소방사무를 수행함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와 행정적·법적·재정적 차별이 존재한다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자 지방분권 강화의 역행이다.

창원의 소방사무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의 정비를 102만의 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련 13개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여 동일한 광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창원시장을 소방사무의 행정주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소방사무 수행하는 창원시에 별도의 소방본부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동일한 소방사무 수행하는 창원시에 독립적인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1일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을 11. 25. ~ 12. 21.(27일간)로 최종 확정했다.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구점득)는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2023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12월 2일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창원시정연구원 △최윤덕도서관 △창원과학체험관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했다.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또한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12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 체결에 따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12월 2일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감계복지센터 △창원시아동 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박선애)는 소관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1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12월 15일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창원재활용종합단지 △2호 창원승승통놀이터 조성현장을 방문해 주요 사업장 실태파악과 안전점검에 나섰다.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길상)는 소관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10월 28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장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펫-빌리지 시설 현장 △안민동 시내버스 회차장 이전 현장 등 3개소를 방문해 현안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권성현)는 소관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20 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천수)는 12월 9일부터 양일간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20일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했다.

1



강창석 의원

반송, 용지동

- 1 제118회 정례회 '태양광 폐패널 관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 2 용지동 통장협의회와 태풍 '힌남노' 복구 거리청소
- 3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 4 농촌일손돕기에 나서 참다래 수확
- 5 반송동 창원천 인도교 설치 관련 민원 상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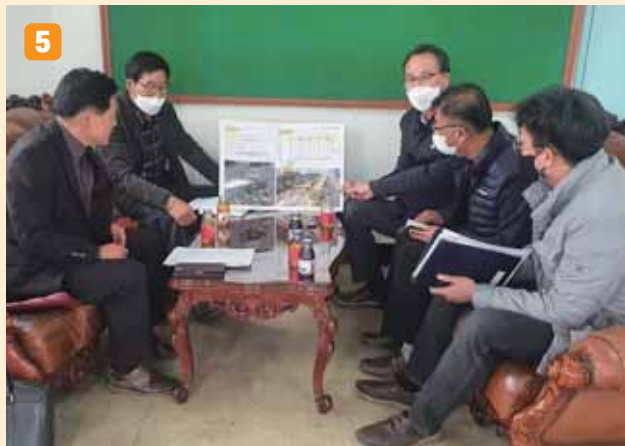
4



3



5



1



김경수 의원

상남, 사파동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및 회의 진행

2 제4대 시의회 의장단 충훈답 참배

3 의창구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

4 태풍 '힌남노' 대비 재난방지시설물 예찰활동

5 2022 한마음 생활체육 대축전 행사 참석

2



4



3



5



1



김경희 의원

중앙, 웅남동

- 1 제118회 정례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독주택지 도시계획 변경' 5분 자유발언
- 2 제12회 창원사랑 나라사랑 도심숲길 걷기대회 참석
- 3 제120회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 4 2022 창원복지박람회 행사 참석
- 5 노인의 날 기념 '중앙동 효큰잔치' 행사 참석

2



4



3



5



1



김영록 의원

가음정, 성주동

- 1 제118회 정례회 '창원형 1호 위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5분 자유발언
- 2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한마음다짐대회 참석
- 3 제118회 정례회 의원발의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4 추석을 맞아 성주동 성주파크빌 경로당 어르신 방문
- 5 사파지구개발관련 현장 민원관련 논의

2



4



3



5



1



박해정 의원

반송, 용지동

- 1 제119회 임시회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
- 2 반지복지회관 무료급식소 봉사 활동
- 3 제120회 정례회 의원발의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 4 반송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사랑나눔 행사 참석
- 5 축사 악취 저감사업 실시 제안 위한 현장 방문

2



4



3



5



1



백승규 의원

가음정, 성주동

1 제119회 임시회 ‘성산구청 이전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

2 ‘성주동 365 현장 밀착 추진단’ 봉사활동 격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 종합심사

4 성주동 청소년주민자치회 창원시의회 견학 방문

5 가음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2



4



3



5



1



성보빈 의원

상남, 사파동

- 1 제119회 임시회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중심도시
창원특례시를 고대하며’ 5분 자유발언
- 2 상남동민 문화축제 한마당 행사 참석
- 3 제120회 정례회 의원발의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 4 사파게이트볼장 민원 현장 찾아
- 5 사파동민 한마음 문화축제 행사 참석

2



4



3



5



1



이정희 의원

중앙, 웅남동

- 1 제120회 정례회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시정질문
- 2 웅남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참석
- 3 제120회 정례회 의원발의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4 창원복지박람회 행사 참석중 심폐소생술 체험
- 5 중앙동 통장협의회와 태풍 '힌남노' 복구 거리청소



1



한은정 의원

상남, 사파동

- 1 제120회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 2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시민참여토론회 참석
- 3 기후위기 그린뉴딜정책연구회 결과보고회
- 4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운영현황 점검
- 5 마산 만날공원 출렁다리 공사현장 안전점검차 방문

2



4



3



5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발한 활동으로 하반기 연구용역 마무리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정희)는 11월 16일 「창원시 도농 상생 발전방안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3가지 중심 주제인 상호 대등한 교환형 도농상생 방안과 지역구의 다양한 관광지를 활용한 도농상생 방안 그리고 소농을 위한 농산물 직구매 지원 사업 등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시하며 하반기 연구를 마무리했다. 이정희 대표의원은 “연구결과를 면밀히 살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정책 발굴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전홍표)는 11월 14일 「창원시 탄소중립 수변관광자원 개발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3.15 해양누리 공원과 삼귀해안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수변관광자원 개발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홍표 대표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은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그린뉴딜 정책연구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대표의원 심영석)는 11월 7일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다전 행복발전소 협동조합 등 타지역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비교 견학을 통해 창원형 마을공동체 센터 설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1월 16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도출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심영석 대표의원은 “올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형 마을공동체센터 설립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연구회(대표의원 최정훈)는

11월 25일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지역 청년 계층 세분화와 각 층별 정책 방안 제시 및 연구」 결과보고회 후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를 통해 창원시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훈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들과 더 깊이 숙고해 창원형 청년 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일자리연구회(대표의원 진형익)는

11월 11일 창원형 미래일자리 발굴을 위한 「경남 콘텐츠 산업 실태와 창원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3차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일자리연구회는 ‘창원형 미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창원시 청년 미래일자리 실태조사’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창원형 미래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를 마무리했다. 진형익 대표의원은 “청년, 로봇, 미디어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 10. 7. 제118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3. 2022 창원글로벌 나눔 걷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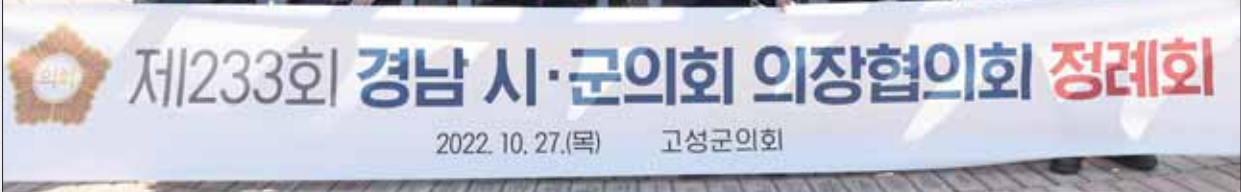
2022. 10. 18.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창원특례시 기념일



2022. 10. 26. 창원특례시장배 파크골프대회



2022. 10. 26. 아동구조활동 의원 및 학생 표창 수여



2022. 10. 27. 제233회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2022. 11. 8. 의장단 간담회



2022. 11. 8. 창원복지박람회



2022. 11. 10. 농촌일손돕기



2022. 11. 15. 의창구청 신청사 개청식





2022. 11. 25. 제12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2022. 11. 26. 2022 창원농업페스티벌



2022. 11. 26. 김장 사랑나눔 행사



2022. 12. 5. 제1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2022. 12. 8. 민주평통 창원시협의회 정기총회



2022. 12. 14.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46차 시도대표회의



2022. 10. 10. 창원시보 295호



김 경 수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창원특례시를 꿈꾸며

재선 의원으로서 시의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에 접어들었다. 지난 4년간 일선에서 느낀 바를 토대로 다시 4년을 오직 창원특례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다. 이번 전반기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았기에 그 책임감은 더욱 막중하다. 창원특례시 곳간의 살림살이에 늘 촉각을 곤두세운다.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의 얼굴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 모습을 보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떠올랐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봉사활동을 하던 시간을 지나 아이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와있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며, 창원특례시도 이 고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창원시는 2022년 특례시로 지정되었지만 2년마다 특례시 지위를 재평가 받아야 하며, 이 중 가장 큰 조건은 인구수 100만 유지다. 2010년 통합 당시 109만이었던 인구수는 2022년 7월 기준 102만까지 감소했다. 특례시 출범을 위해 노력했던 창원시는 특례시 유지를 위한 인구 유출 방지와 출산 장려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해답을 내려야 할 때다.

계약직 시의원인 나는 직접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다만 아이를 조금 더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무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육아용품 도서관' 개설을 제안해 본다.

우리 아이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다. 그러나 육아용품은 부피가 커 보관이 힘들며, 급성장하는 영유아의 경우 교체 시기도 짧다. 육아용품 특성상 비용적 부담 또한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창원시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며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5곳에 불과해 '육아용품 도서관' 신설은 필수적이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 사용 기간이 짧지만 꼭 필요한 육아용품을 시가 구매하고 시민들에게 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에게 맞는 육아용품을 추천, 사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육아용품 전용 사서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육아용품 도서관'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 마련도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용품을 예약·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필수다.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제 창원특례시가 그 '온 마을'이 되어줘야 할 시기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어렵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창원특례시를 꿈꾸며,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 선 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매미와 정어리

가을은 태풍의 계절이다.

특히 9월의 태풍은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 태풍보다 위력이 세고 피해도 크다.

우리는 기억한다. 지난 2003년 9월 추석연휴에 불어닥친 태풍 ‘매미’는 59년 ‘사라호’ 태풍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낸 태풍으로 마산에서만 18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당시 필자도 아파트 베란다 유리가 깨지고 공장 지붕이 날아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당시 마산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피해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행정적 대피명령이나 긴급안내가 없어 추석 연휴를 즐기던 많은 시민들이 졸지에 생명을 잃었으며 특히 청년들의 피해가 컸다.

2003년 “매미”라는 이름의 태풍은 준비가 미흡한 채 맞이한 자연재해이자 안일한 행정으로 빚어 낸 인재(人災)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를 긴장시켰던 초강력 태풍 ‘힌남노’는 ‘민·관이 합심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피해를 최소화한 모범적인 사례다.

‘매미’에 대한 뼈아픈 기억이 2003년과 시기적으로 비슷했던 ‘힌남노’ 복상에 창원 시민과 공무원 모두를 결집하게 만들고 교훈적인 사례가 되었다.

마산은 바다를 낀 지형상 태풍이 지나갈 때면 늘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번 합포구에서는 18만 개의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배부했고, 많은

공무원들과 시·도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위험 취약지구를 점검했다. 실시간 기상 상황 안내와 ‘매미’ 이후 설치한 서항 바닷가 차수막 그리고 800톤에 가까운 배수펌프장 시설이 안전막 역할을 잘해 주었다. 포항 등 일부 지역이 인명과 침수피해가 컸던 것에 비해 창원은 큰 피해가 없어 사전 준비를 잘했던 것이 드러났다.

9월이 끝나가는 마지막 날 죽은 채 떠내려온 정어리 때가 마산만을 하얗게 뒤덮는 사태가 발생했다. 새로운 명소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해양누리공원 산책로에는 비린내와 악취로 민원이 폭주했다. 민·관이 나서 100톤이 넘는 엄청난 양을 수거해 소각했다. 창원시와 국립수산물관리원, 해양수산청, 해경, 해양환경관리공단까지 나서 원인 규명을 한 결과 산소 부족으로 나왔지만 이를 100%믿는 시민은 없는 것 같다.

공동운명체인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특히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자연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최선일까?

가을의 길목에서 ‘매미’와 ‘정어리’를 통해 자연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본다.

2022. 11. 10. 창원시보 297호



김혜란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특례시, 양성평등을 위한 첫 걸음이 필요한 때

유모차를 끌며 아기띠를 멘 아빠. 고요하고 행복한 모습도 잠시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자 아빠는 발을 동동거린다. 분유가 든 우유병을 흔들어가며 아기 아빠는 수유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 과연 아기 아빠는 수유할 공간을 찾아 아이의 고풍 배를 채워줄 수 있었을지 궁금했다.

이것은 얼마 전 대형 쇼핑몰에서 보았던 광경이다.

지난 2009년 1월 「모자보건법」에서 “모유 수유 시설 설치” 조항이 신설된 이후 아이와 동행한 여성을 위한 수유실이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도 역시 높아진 요즘, 여성 전용으로 인식되던 수유실이 양성평등 정책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다.

103만 인구의 창원특례시는 과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양성평등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며 참여 기회와 권리와 의무 그리고 똑같은 자격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우리 시는 선도적으로 대형백화점, 쇼핑몰만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유실 등의 육아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서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장려 보조금 같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양성평등을 확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이는 양성평등 확립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가 양성평등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단순 권고사항으로 의무적인 설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육아 편의시설 부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영유아 가정의 부모들은 여전히 많다.

이제 창원특례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공공시설의 여성 모유 수유실 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한 수유실 또는 돌봄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성평등에 기반을 두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작지만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이다.



김 우 진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통’과 ‘책임윤리’를 지닌 시의원의 사명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굵직한 민원을 해결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다. 시의원이란 막중한 무게를 느끼며 한편으로는 창원시민의 한사람이란 마음으로 신중한 의정활동을 했다. 주민이 선출한 대표인 지방의원은 자신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이를 긍정으로 전환해 모두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지역민들이 ‘신념’의 문을 통해 정치인을 맞이 하지만, 그 뒤에는 더 무거운 ‘책임’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인은 ‘소통’과 ‘책임윤리’ 모두를 지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잠시 나를 되돌아 본다.

먼저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간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또한, 사회적 불평등 치유에 매진하고 있는지,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능력이 있는지 나 자신에게 자문한다. 이를 통해 부족한 점은 메우고 강점은 키우며 필요한 역량을 채워가야겠다.

또한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명쾌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본다. 주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준비를 하며 끊임없이 점검해 강한 추진력으로 나아갈 것이다. 각계 · 각층 지역민들을 만나고 토의하며 여론을 수렴해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으로서 의무이자 결코 피해서는 안 될 숙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은 소통과 책임윤리를 마음 깊이 담고 주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주민의 마음을 더 헤아리며 소통의 장을 열어갈 일만 남았을 뿐이다.

창원시민 모두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창원 특례시의회를 위해 오늘도 각오를 다진다.



2022. 12. 10. 창원시보 299호



김 경 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토끼처럼 활동성 넘치는 계묘년 새해가 되기를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유족들의 절규를 보며 아직 진상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죄스러운 마음뿐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연말연시는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있다.

새해 희망은 사상 유례없는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 속에 묻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대폭락은 초유의 충격파를 던지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은 줄을 서서 기다린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7%대로 잡아 경제한파를 예고했다. 울고 싶은 데 뺨까지 때려주는 격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선현들의 지혜 중에 여민동락(與民同樂)이 있다. 『맹자』 「양혜왕(魏惠王)」편에 나오는 고사다. 조선 최고 유학자 이황은 여민동락을 들어 영의정을 지낸 당대의 권력자 권철을 꾸짖은 적이 있다. 권철은 권율의 부친이다.

“원로(遠路)에 누지(陋地)를 찾아오신 대감께 융숭한 식사를 내드리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대감께 올린 식사는 백성들이 먹는 식사에 비한다면 진수성찬이었습시다. 그런데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는 대감을 보며 이 나라의 장래가 은근히 걱정스럽습니다. 무릇 정치의 요체는 여민동락에 있사운데 관과 민의 생활이 이처럼 동떨어져 있으면 어느 백성이 관의 행정에 마음으로 따르겠습니까?”

고기불이라고는 북어무침뿐이고 보리밥에

산나물만 그득한 밥상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며칠 묵으며 대학자와 학문을 논하려던 결심을 버리고 작별을 고하던 권철은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수그렸다. “참으로 선생이 아니고서는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깨달은 바가 많으니 돌아가면 선생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고사를 되새기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퇴계 이황과 쌍취헌 권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나라가 어렵다.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겐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연말이 될지도 모른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족의 마음은 춥고 외로운 별판과도 같을 것이다. 세모(歲暮)의 불빛에 흥청거리는 일은 없는지 차분하게 돌아볼 일이다.

필자 또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며 언제나 ‘여민동락할 결심’을 새롭게 다진다. 그리고 **계묘년 새해는 토끼처럼 활동성 넘치는 희망찬 해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박 승 엽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청년이 다시 찾는 창원시를 바라며

청년의 인구 유출이 창원시 인구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은 창원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해졌다. 이에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창원시의원으로써 청년을 위한 몇가지 정책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수많은 청년정책을 만들고 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정책이라도 수요자가 알지 못한다면 정책에 대한 효과는 떨어진다. 서울시는 청년 정책 종합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을 만들어 청년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 곳에서 새로운 정보도 얻고, 서비스 신청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창원시에도 이런 '청년 정책 플랫폼'이 필요하다. 디지털과 플랫폼 문화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과거 방식의 홍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창원시도 '청년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 시의 훌륭한 청년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청년들은 그 속의 커뮤니티를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높은 물가, 집값으로 인해 청년 맞벌이는 필수가 되었고 그들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큰 부담이다. 출생율은 도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공공에서 적극 나서 신혼부부(청년부부)가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이를 낳고 공공 교육 전까지 공공 산후 조리원이나 공공 아이 돌봄센터 등 새로운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커진다면

청년들은 창원으로 모여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갈까?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단순 임금만이 아니다. 임금도 중요하지만, 업무 환경 또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 창원의 공단에는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 업무 중 받은 스트레스를 풀며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없고, 동료들과 담소를 나눌 공간도 없다. 이러한 환경은 재정적 투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울 구로단지는 슬럼화되는 일반공업지역을 1990년대 후반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많은 IT 기업과 편의시설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구로디지털단지가 만들어졌고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고 있다.

창원시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의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한다면 이에 맞는 민간업자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공단이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편의시설과 생활인프라가 조성되어 업무환경은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다.

창원시가 청년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이 다시 찾는 도시로 변화할 수 있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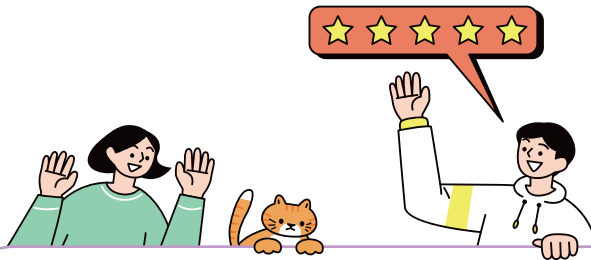


2023년도 창원시의회 연간 회기 운영일정(안)

월별	회기별	회 기		주 요 처 리 안 건
	계	8회 110일		(정례회 52일, 임시회 58일)
임 시 회	제121회	1. 13.(금) ~ 1. 19.(수)	7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22회	3. 7.(화) ~ 3. 20.(월)	14	•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시정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23회	4. 20.(목) ~ 4. 27.(목)	8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 차 정 례 회	제124회	6. 5.(월) ~ 6. 30.(금)	23	•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시정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임 시 회	제125회	7. 18.(화) ~ 7. 26.(수)	9	•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26회	9. 7.(목) ~ 9. 21.(목)	15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시정질문
	제127회	10. 23.(월) ~ 10. 27.(금)	5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 차 정 례 회	제128회	11. 27.(월) ~ 12. 22.(금)	26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 2023년도 추경예산안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민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인터넷방송
YOUTUBE, SNS로
창원특례시의회를 만나보세요.



방청안내

방청안내 일반신청(개인)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방청절차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 방청

문 의 의회사무국 : 055)225-5311

홈페이지 <https://council.changwon.go.kr>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소개, 의정활동, 의회기능, 회의록 검색, 의회에 바란다 등 의회의 다양한 정보검색은 물론, 창원시의회 대외적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시민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https://council.changwon.go.kr>